김용철 변호사 '삼성 비리' 추가 폭로

"계열사 5곳 6,000억~2조원 분식회계"

2000년 한해동안…"회계, 법무법인 책임도"
"비자금으로 600억원 고가미술품 구입"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는 26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 삼성그룹의 계열사 5곳이 6천억원에서 2조원에 이르는 분식회계 각각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삼성중공업이 2조원을 분식회계한 것을 비롯해 삼성항공 1조6천억원, 삼성물산 2조원, 삼성엔지니어링 1조원, 제일모직 6천억원을 각각 분식회계처리했다"며 "분식회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부를 유출시키는 방법을 통해 분식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중공업은 분식 규모가 너무 커서 거제 앞바다에 배가 없는데도 건조 중인 배가 수십 척 떠 있는 것으로 꾸미는 등 무모하게 처리했다"며 "이처럼 각 계열사의 분식회계 규모가 컸음에도 감리회계 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를 알면서도 향응을 제공받고 사실과 다르게 적정의견을 줬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2002~2003년 삼성그룹의 비자금을 이용해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여사 등이 600억원대의 미술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 여사와 신세계 그룹 이명희 회장, 이재용씨의 빙모인 박현주씨,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부인인 신연균씨 등이 이 기간 고가 미술품을 구입했다"며 '베를레헴 병원'(프랭크 스텔라), '행복한 눈물'(리히텐슈타인) 등의 그림이 포함된 구입 미술품의 리스트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또 "삼성물산은 삼성계열사의 해외 구매 대행과 그룹 내 공사를 맡아 하기 때문에 비자금을 조성하기 용이하다"며 삼성전관과 삼성물산 런던, 타이페이, 뉴욕 사이에 1994년 체결된 설비구매에 관한 합의서(메모랜덤)를 내놨다.

김 변호사는 "중앙일보의 삼성그룹 계열분리는 이건희 회장의 중앙일보 지분을 홍석현 회장 앞으로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위장분리였다"면서 "삼성그룹이 삼성자동차가 파산할 때 분식회계서류를 빼내 (부산) 해운대에서 소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해마다 삼성 내부에서 작성하는 '핵심지인 리스트'를 만들어 별도로 관리하기도 한다.

그는 "삼성이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매수하기 위해 접근할만한 법조인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했다"며 110여명의 법조인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김용철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일가가 비자금을 이용해 고가 미술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김 변호사 주장은 허위, 왜곡, 과장"

삼성은 26일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에 대해 "허위, 왜곡, 과장된 주장을 거듭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가 제기해 온 허위 주장들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강구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삼성물산을 통해 해외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가 비자금 조성 증거라고 제시한 메모랜덤은 회사에서 5년 내외까지 서류를 통상적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13년전인 1994년 작성된 서류에 대해 곧바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은 비자금을 이용해 고가 미술품을 구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리움 미술관과 홍라희 관장 모두 서미갤러리로부터 '베들레헴 병원' 작품을 구입한 적이 없다"며 "다만 '행복한 눈물'은 홍 관장이 개인 돈으로 구입해 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분식회계와 삼일회계법인이 관련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글로벌 회계기준에 맞춰 회계처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분식 회계는 있을 수 없다"며 "회계법인도 공표된 자료에 대해 동반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향응접대를 받고 사실과 다르게 의견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관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김앤장은 26일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김 변호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종태기자jtlee@kwangju.co.kr·연합뉴스

'삼성 비자금' 4~5명 출금…수사 급물살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가 26일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비자금 조성 및 '떡값' 제공 의혹과 관련해 삼성 관계자 등 4~5명을 출국금지 조치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검찰에 고발장을 낸 지 20일만이다.

박한철 본부장은 이날 출금 사실을 밝히면서 "수사에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 출금 조치를 취했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출금 조치를) 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미뤄볼 때 검찰이 이들 4~5명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상 필요한 일정 협의를 포착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결국 검찰이 향후 수사시 관계자들의 해외도피 가능성 등에 대비해 출금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로 일정 부분 협의를 확인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아직 고발인에게 정식으로 출석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 대신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 이번주 중에 나와 신속히 조사에 응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내년 예산안 처리 기한 또 넘겨

헌법상 기한 이달 말까지 국회의결 사실상 불가능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또 다시 헌법상 기한을 넘기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 심의가 지연되면서 헌법상 기한인 이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헌법 제54조는 회계연도 30일 전(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어있으며 올해는 12월 1일이 토요일, 2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오는 30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심사가 일주일 이상 걸릴 전망인데다 각 상임위의 증액 예산은 아직 손도 못된 상태여서 이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세입 규모를 확정해야 하나 정작 세제 개편안은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 개정 소위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예산 심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헌법상의 기한인 이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실정이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의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어 국가 경제가 어렵게 되면서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정부 사업 예산안은 대부분 감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일부 상임위 증액 사업과 예결위에 끼워넣기 식으로 제출된 일부 지역 현안 사업들은 예산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광주·전남지역 예결위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문광위에서 반영된 문화콘텐츠 기술 연구원 설립 예산(70억원)의 통과와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예산(30억원) 지원 등이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전남도는 SOC 사업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광주~완도 고속도로 100억원, 무안국제공항 확장 200억원, 화양~적금 간 연륙·연도교 건설 40억원, 압해~화원 간 연결도로 건설 40억원 등의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동어로구역·경협 군사보장조치 협의

남북 국방장관회담 오늘부터 평양서 개최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을 논의할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27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 송정각 초대소에서 개최된다.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1차 회담에 이어 7년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는 남측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정승조(중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찬봉 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조병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문성묵(준장 진급예정자) 국방부 북한정책팀장 등 5명이 대표로 참가한다.

북측은 김일철(차수) 인민무력부장을 단장(수석대표)으로 김영철 중장(남측 소장급), 허찬호·리인수 소장(준장급), 박림수 대좌(대령급) 등 5명으로 회담 진용을 구성했다.

남측 대표단은 27일 오전 10시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출발, 서해직항로를 통해 평양을 찾는다.

이번 회담은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 뒤이어 개최돼 남북관계 합의사항 이행 및 개선에 대한 북한 군부의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연합뉴스

국회 통과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 동 철 의원

"광산구 농민 지원 받게돼 기뻐"

"광주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1만여 명의 농민들이 빠르면 내년 6월부터 다양한 농업 관련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그동안의 고생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보람이 느껴집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기본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광산구의 농민들이 각종 정부 혜택을 받게 된 것과 관련, 김동철(광주 광산·사진) 의원은 "지난 1988년 광산군이 광주시에 편입된 이후, 광산구의 농민들은 전남지역 농민들과 똑같이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정부 혜택에서 제외됐었다"며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불합리한 법이 고쳐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11월,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법률상 제약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2005년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후 정부에서도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부분을 적극 수용, 결국 3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내년 6월부터 광산구 농민들도 농업 기계화 사업 지원은 물론 농산물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 사업과 소득원 다양화 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며 "또한,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과 농업인 건강 보험료 감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업인 자녀 대학 특별전형 수혜 등 다양한 복지 혜택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